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수 신 : 부산지역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시행일자 : 2026년 5월 20일 (총 9쪽)

발 신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의 : 박정희 사무국장 010-6769-9201)

제 목 : [보도자료]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6·3 지방선거 미디어 정책 제안 결과 발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민언론 네트워크는 소속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 언론 환경 개선 및 공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공동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산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고, 아래 [붙임자료1]과 같이 채택 여부 및 기타 의견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책무와 정책 추진'에 채택 입장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역맞춤형 정부광고 지표 마련' 등 세부 추진 정책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제안 역시 검토 또는 부분 추진 등 기타 의견을 답했습니다. 특히 브리핑룸 완전 개방 정책에 박형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4. 부산민언련은 지역민언론 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정책은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1.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답변 결과

■ 붙임자료2.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세부내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 붙임자료 1

부산시장 후보 대상 <6-3 지방선거 미디어 정책 제안> 결과

1. 추진 경과

- 질의서 전달 : 5월 6일
- 회신 기간 : 5월 13일
- 질의 대상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2. 답변 결과

(*후보별 회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1) 답변 현황 (종합)

분야	세부 정책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 넌스 구성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채택	채택	채택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검토	기타의견	기타의견
지역민을 위한 소 통 강화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검토	기타의견	기타의견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검토	채택	채택
	조례 제정	적극 검토	기타의견	기타의견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검토	반대	기타의견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검토	기타의견	기타의견

2) 후보별 답변 세부내용 (응답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분야	세부 정책	채택	반대	기타의견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 넌스 구성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
지역민을 위한 소 통 강화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		

	조례 제정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인 만큼 집행 기준을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광고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특정 지표만으로 매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성, 공공성, 신뢰성, 정보 전달 효과, 매체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간부회의에는 인사, 계약, 법률 검토, 개인정보, 재난 대응 등 즉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회의, 현안 브리핑부터 공개를 넓히고, 간부회의는 공개 가능한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정 브리핑, 주요 회의 자료, 영상 자료는 시민이 나중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언론과 시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초상권, 제3자 저작권이 걸린 자료는 별도 기준을 두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을 시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는 실제 운영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공개회의, 아카이브, 브리핑룸 운영 기준을 먼저 정비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시청의 소통 공간이 특정 매체만을 위한 공간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 지역 소수 매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행사 질서 문제를 막기 위한 기본 운영 기준은 필요합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답변하는 방식도 주요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분야	세부 정책	채택	반대	기타의견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
지역민을 위한 소통 강화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		
	조례 제정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

○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채택]

- 지역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지역방송·공동체 미디어·시민 미디어 활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 지역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의 관성적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익 콘텐츠와 지역 공론장 활성화 사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평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확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의견]

- 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 다만, 특정 기준이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되,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매체,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회의 결과 공유,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간부회의를 일괄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은 정책 조율 과정, 보안 사항, 미확정 사안, 인사·계약·재난 대응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면 생중계 방식보다는 공개 가능한 회의와 안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회의 결과와 주요 정책 논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현실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민이 시정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정책자료, 브리핑 영상 등 공공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정책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입니다.
- 시정 관련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언론, 연구자, 시민사회가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콘텐츠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기존 법령 및 부산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예산 수반 여부, 시의회 논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역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 부산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반대]

- 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시청 브리핑룸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청사 보안, 현장 운영 기준, 언론사 간 형평성, 행정 업무의 안정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브리핑의 공개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부산시는 주요 정책 발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브리핑,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 등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필요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와 생중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브리핑을 예외 없이 전면 생중계하는 방식은 사안의 성격, 현장 질서, 개인정보, 보안, 미확정 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의무화보다는 공개 필요성이 높은 브리핑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사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아카이브와 자료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분야	세부 정책	채택	반대	기타의견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검토
지역민을 위한 소통 강화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검토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검토
	조례 제정			적극 검토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검토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검토

○ 개별 의견 없음.

6.3지방선거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제안

“지역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때”

- 지역 미디어 2대 분야 · 7개 세부 과제 -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미디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기존 언론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축은 개별 언론사의 경영난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지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건강한 지역 공론장 형성을 가로막습니다.

지역 내 민주주의 구현은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지역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국가나 사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닌,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지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공공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을 위해 공동으로 지역 미디어 2대 분야, 7개 세부 과제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1)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구성

- 지방정부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 언론 환경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할 '지역 미디어 거버넌스' 구성이 시급함. 언론운동단체, 시민사회, 학계,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이 공론 기구는 단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시민의 관점에서 미디어 의제를 상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핵심 창구로 역할 할 수 있다.
- 또한 신문과 방송은 물론 공동체 미디어와 일반 시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를 통해, 지역 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강화 및 지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향상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 지역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신문·지역방송·마을공동체미디어 및 시민 미디어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책정, 사업 방향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1-2)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은 객관적 지표나 홍보 효과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운영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홍보비를 통해 언론사와 시정의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행정 역시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ABC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부 광고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저널리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저널리즘 지표(자체기사비중,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정상발행 여부 등)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표는 공개하도록 한다.

2. 지역민을 위한 소통 강화

행정과 지역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공개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행정은 출입처와 출입기자단 중심으로 정보를 유통하며 가공된 정보를 지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시민을 중심으로 행정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전달' 과정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1) 지방정부 행정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및 아카이브 강화

1-1)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 정보의 폐쇄성이 가져오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부회의(또는 실·국장 회의) 생중계'가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수치화된 책임 행정의 도입이 가능하다. 정부 사례에서 생중계 도입 이후 공직 사회의 정책 숙지도와 발언의 책임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높다.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형식적인 보고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토론이 오가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생중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홍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보도자료를 통한 행정 소통 방식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편집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될 때 시민의 신뢰는 높아지고 정책 확산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행정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 소송, 민원을 야기한다. 국무회의 생중계가 정부 신뢰도를 높여 정책 집행의 동력을 확보했듯, 지방정부 역시 회의 공개를 통해 갈등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1-2)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 회의 자료 사전사후 공개 및 아카이브 형태 제공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피드백 창구 운영 및 다음 회의에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도 답변 단계에 포함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발생된 영상 저작권은

공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완화된 조건도 필요하다.

1-3) 조례 제정

- 시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제도화하여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2) 모두에게 열린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 공간' 도입

2-1)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 기존 기자회견장을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이 필요함. 출입 기자 유무나 매체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지역민이 지방정부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2-2)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 정보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브리핑룸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을 온라인 생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민이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단순 브리핑 중계에 그치지 않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쌍방향 소통 창구 도입도 필요하다. 온라인 생중계 시 시민들이 채팅이나 질의 게시판 등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통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